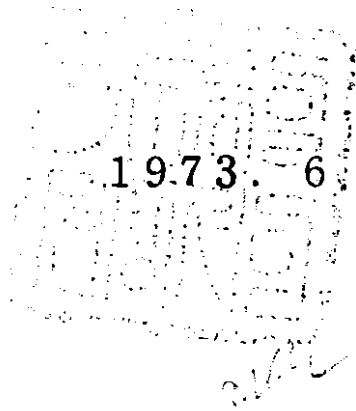


韓國의 對소平和外交 方案



國土統一院

이 報告書는 國土統一院 73年度 上半期
學術用役に 관한 最終報告書로 提出합니다

1973年 6月 日

研究機關：韓國外國語大學 極東問題研究所

研究委員：金 鶴 秀 ， 金 在 九

目 次

序 說	3
I. 아시아 國家로서의 蘇聯	5
1. 初期 蘇聯의 對亞政策 (對中共政策을 中心으로)	9
가. 帝國러시아의 東占政策	9
나. 소비에트 政權의 成立과 對亞赤化戰略의 形成	10
(1) 「10月革命」과 中國의 反應	11
(2) 「10月革命」에 對한 中國의 報道	12
(3) 1917年 革命以後 蘇聯의 對中國政策	13
(4) 第1次 카라한宣言	15
(5) 第2次 카라한宣言	18
(6) 結 論	20
2. 中期 蘇聯의 對韓半島政策	21
가. 戰中政策	21
나. 戰後政策	25
II. 多極化時代와 強大國政策	33
1. 國際政治와 強大國	37
가. 國際政治의 新 傾向	38
나. 列強政治 理論의 再抬頭	43
2. 아시아의 可能性과 強大國政策의 패턴	49
가. 脫 이데올로기	58
나. 平和共存 - 全面戰爭의 回避	58
다. 내셔널 프레센스의 誇示	59

序 說

本稿의 목적은 아시아에 있어서의 새로운 시대의 전개

- (1) 닉슨·독트린에 의한 아시아·太平洋 冷戰構造의 變革的 衝激
- (2) 이로 인한 아시아力學關係의 眞空을 予見한 소련의 集團安 保構想(브레즈네프·독트린)의 抬頭
- (3) 美國과 中共關係의 발전적 再編成
- (4) 日本의 獨白路線을 상징하는 中共과의 關係 正常化
- (5) 美·中共間의 政治的 接近에 對備한 소련의 對日接近 摸索
- (6) 東·西冷戰構造에서의 최후의 전쟁으로 評價되는 越南戰爭의 終熄

등의 사태에 직면한 韓半島問題의 將來를 유리하게 결정 지을 수 있는 요인의 하나로 한국의 對蘇接近 方案을 科學的인 調查方法에 따라 羅列해 보는데 있다.

그러나 國家關係의 발전은 相互利益의 共通基盤을 許容하는 데서 이루어진다.

韓國과 蘇聯의 國家의 利益의 共通基盤은 어떤 것인가?

韓國의 對蘇接近 實益은 무엇이며, 소련의 對韓政策의 原形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우선 대답을 마련해야 된다.

그 위에 對蘇接近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합리적으로 組立하는 것이 科學的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本 報告書의 조사방법도 이상과 같은 客觀的 상황을 체계화 하는데 역점을 주게 될 것인 바 前半部는 소련의 <아시아目的>과 아시아政治戰略의 質量을 정직하게 實測해 보는 부분이고 後半部가

I . 아 시 아 國 家 로 서 의 蘇 聯

I. 아시아國家로서의 소련

미국이 태평양국가란 이름으로 아시아問題에 介入하는데 대한 蘇聯의 對稱은 아시아國家라는 것이다.

領土的 概念에서는 광대한 시베리아가 아시아北部를 压迫하고 있고 軍事的으로는 우리티보크의 極東艦隊가 東海를 牽制하고 있다.

소련의 石油工業과 鎔物資源의 龐大한 分布圖를 시베리아가 갖고 있음은 周知의 事實이다.

蘇聯으로서는 최초의 南進政策이 성공한 곳도 또한 시베리아 南部였다.

아이러니컬 하지만, 만일 中國에 共產主義革命이 성공하지 못했다면 지금의 滿洲地方에 대한 소련의 南下政策은 確固하게 推進되었을 것이고 아울러 韓半島에 대한 年來의 宿願 — 不凍港獲得 — 은 8.15 解放과 더불어 이루어 졌을지도 모른다.

大連과 旅順港의 獲得은 中國大陸의 共產化로 永久性을 喪失하였음은 널리 알려진 事實인 것이다.

물론 一時的인 戰術的 次元에서 蘇聯政府가 國府政權에 대해 帝政러시아代의 領土的 <過誤>를 是正하겠다는 約束(카라한宣言)도 있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中國에 대한 帝國主義 列強들의 貪欲을 견제하여 소련의 中國赤化를 유리하게 誘導하려는 政略에 불과한 것이었다.

이는 中共革命後, 中·蘇國境紛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소련의 確固한 領土意志에서도 읽을 수 있는 터이다.

1. 初期소련의 對亞政策 (對中國政策을 中心으로)

가. 帝政러시아의 東漸政策

帝政러시아의 우랄以東에 領土的 關心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1578年 카작크의 예르마크 (Yermak) 酋長을 사주하여 지금의 톨볼스크 (Tobolsk)를 점령케 한 후 1582年 이반4世가 領土로 獻上받은 것이 그 端緒가 된다고 한다 (註1)

이 보다 앞서 이반4世는 1567年 페트로프 (Petroff)와 야리세프 (Yallysheff) 두 사람을 清朝 (北京)에 파견하였으나 貢物을 지참치 않았다는 이유로 皇帝拜謁을 거절당하고 돌아간바 되었다.

1619年 (톨볼스크 점령후) 다시 에바시코 페트린 (Evashko Pettlin)이 파견 되었으나 같은 이유로 되돌아 왔다 (註2)

이후 넬친스크條約 (1689) (註3)을 거쳐 러시아의 太平洋進出이 보장된 아이친條約 (註4)을 체결하면서 不凍港 우라티브크港을 開設 (1860)할 수 있게 되었다.

넬친스크條約이 中國側의 武力的 背景 밑에서 성립되었던 것과는 반대로 아이친條約은 러시아의 脅迫에 의해 성립되었다는 것은 南進政策에 대한 러시아의 집념이 더욱 強固해 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帝政러시아와 中國 (淸)이 체결한 아이친條約까지의 러시아의 對亞政策의 中心은 領土的 關心에 限定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시아의 大帝國 中國이 병든 아시아의 生産樣式에서 탈피하지 못했을뿐 아니라 世界列強의 帝國主義的 侵略앞에 지극히 무력한 존재임이 늘어나자 소련의 政策中心은 滿洲經略을 거쳐 전

이와같은 狀況에서 소비에트政權이 취할 수 있는 對外戰略은 명백한 것이었다. 그것은 구주와 극동에서의 그들 權益을 최대한으로 양보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아시아에 나타난 것이 이른바 중국에 대한 不平等條約의 폐기선언이었다. 이 선언의 효과는 만주에서의 白系 러시아의 反政府 拠点을 약화시켰고 中國人의 自覺方向을 <10月革命> 路線으로 誘入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하였다.

이는 소련의 對亞赤化戰略의 가능성을 말해주는 것이었고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최초의 우회적 輸出이었다.

(1) <10月革命> 과 中國의 反應

먼저 카라한宣言이 있기전 中國의 소련革命에 대한 반응을 갈라 볼 필요가 있다.

<10月革命>後 소련에 대한 中國의 최초의 호소는 1918年6日 頃 孫文이 레닌에게 보낸 電文이었다.

당시 孫文은 大元帥職을 辭任하고 集團指導制로서의 7人總裁中의 한 사람으로 格下되어 廣東政府의 最高指導者의 지위를 상실한 뒤여서 극도의 失意에 빠져 있을 때라고 한다 (註5)

그 電文全文은 남은 것이 없으나 그 내용은 대강 다음과 같은 것이라고 한다.

<中國의 革命黨은 貴國革命黨員의 非常한 敢鬪精神에 대하여 절대적인 敬意를 표하며 中·蘇兩國의 革命黨이 一致團結하여 共同으로 투쟁할 것을 希望합니다> (註6)

이 電文은 많은 迂餘曲節을 겪어 美國에 居住하고 있는 華僑를 통해 소비에트政府에 전달되었다 (註7)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당시 소비에트 政權의 反革命勢力과의 투쟁

族을 排除하여 民主政治를 건설해야 한다. 우리나라 革命이 요구하는 것도 똑같은 것이다.

이른바 三民主義를 기초로 하여 민주국가를 建設하며 國內의 각 민족 각 계급을 모두 平等하게 하며 個人의 法律上의 人格을 존중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人格 및 民權의 伸張을 이룩하는 것이며 平等自由의 精神을 실현시키는데 있으며 우리나라의 永久한 平和를 建設하는 것이다 > (註10)

말하자면 소비에트의 이른바 <社會主義革命>에 대한 中國知識層의 관심은 대단한 것이었으나 共產主義理論에 관한 지식은 매우 素朴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마치 소련의 共產主義革命이 中國(孫文)의 三民主義理念과 같은 軌를 갖는다고 보고 마르크스·레닌주의의 革命的 理想을 로기를 三民主義의 理念的 立場에서 해석하려 하였음을 본다. 이러한 中國의 태도는 소련 볼셰비키와의 理念的 共存을 가능케 하였을 뿐 아니라 中國에 共產黨이 창당(1921)되고 그 活動이 활발해 지면서 國民黨을 主敵階級으로 몰아 抗争하는 기간에서도 소련은 장개석(蔣介石)에 보다 밀착하여 中國問題를 처리하게 하였다.

(3) 1917 革命後의 소련의 對中國政策

소비에트政府는 <10月革命>直後 1917年1月8日에 行한 소위 <平和宣言>에서 이미 帝政러시아가 체결한 일체의 秘密條約을 <完全하게 즉시 이를 폐기한다> (註11)는 要旨의 성명을 발표 한바 있다.

소비에트政府가 中國과 소련 관계에 관하여 최초로 상세히 논급된 것은 1818年7月4日 치체린이 第5回 소비에트大會에서 행한

획책한 奸巧한 對外戰略의 결합에서 발생하는 二重效果이다.

그러나 당시 中國側 사정으로는 소련의 이같은 제의를 정치적으로 완전하게 수용할 수 없는 사항이었다. 따라서 소련의 제의에 대해 明白한 回答이 있을 수 없었다. 이로부터 약 1年後인 1919年7月26日 당시 極東에서 暗躍하고 있던 소비에트 共産黨員 비렌스키(Vladimir Vilenky)는 이즈베스차 紙上에서 소련의 中國政策을 말하는 가운데 中東鐵道問題를 언급하여 <소비에트側에 依한 中東鐵道の 移讓>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언제나 완전히 꼬리를 찢은 革命的 포기제의가 아니고 …… 南部의 一支線을 日本側에 매각용의> 등 정치적인 余白을 가진 建論적 선언에 시종한 것이었다.

(4) 第1次 카라한 宣言

1919年7月25日 소비에트 外務人民委員 카라한(Leo Karakhan)은 <中國人民 및 中國의 南北兩政府에 대한 聲明> 이문바 第1次 카라한 宣言을 發表하였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소비에트軍이 外國의 武力 및 外國의 財力에 의하여 원조를 받은 反革命 專制主義者 골차크軍隊를 打破하고 승리를 거두고 시베리아로 進入 드디어 시베리아의 革命的 人民과 合流하기에 이르렀다. 比際에 外務人民委員部는 中國의 全体 人民에 대해 다음과 같은 同胞로서의 말씀을 전한다.

2年間에 結친 鬪爭과 밀기 어려운 노력 끝에 소비에트 러시아와 소비에트赤軍은 우랄山脈을 넘어 東方을 향해 進軍하고 있다. 이는 压迫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奴隸化하며 征服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다. 시베리아의 모든 農民과 모든 노동자들

밑에서 또는 盜賊홀바트, 세묘노프, 골차크 밑에서 러시아의 將
軍, 商人, 資本家가 맺은 일체의 鐵山, 森林, 金銀 및 기타의
利權에 대하여 代價를 구하지 않고 中國人民에게 반환
한다 > (註 14)

이 일절은 약 1年 2個月 後의 1920年 9月 27日 소비에트
政府가 外務人民委員 卡라한 名義로 발표한 第2次 卡라한宣言(註15)
에서 실린 내용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第2次 卡라한宣言에서는 中東鐵道の 무상반환 部分이 修正되어

있어서 嶺南 中·蘇兩國의 國境問題에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요컨대 帝政러시아時代의 領土의 野望은 不斷하게 흐르고 있었지
만 레닌의 中國情勢觀에서 오는 차이 때문에 革命的인것처럼 소
련의 提議가 着色되었을 뿐이다. 다시 말해서 第2次 卡라한 선언
이 발표되었을 때에는 시베리아의 政界가 레닌에게 결정적으로 유
리하게 판독되었을 때였다. 따라서 당시 상황을 기술하는 사가
들이, <... 소비에트의 對中國政策은 本質적으로 보아 欺瞞的 性格
을 갖는 것이었다 > (註 16)는 주장에 기본적으로 일치된 견해를
보이는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러나 다른 일방 소련은 정책수정은 당시 중국정세로 보아 第
1次 선언대로 소련이 이행하는 경우 中東鐵道는 反動軍備(北方政
府指稱一註筆者)의 手中의 實질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註 17)說
도 있다. 하지만 後의 中共이 中國을 派化했음때까지도 國境問題
와 滿洲利權問題로 오랫동안 부당한 희생기간을 가졌던 소련측 때
도로 보아 근거 박약한 주장이라 하겠다.

은 우리들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重大한 오해를 잘 설명하는 것으로서 이 誤解는 우리가 말한 내용 가운데 數個處를 誤訳한 翻譯者들 탓으로 돌릴 수 밖에 없습니다.

나는 한번도 또한 어떠한 장소에서도 中東鐵道에 관한 일체의 권리가 中國에 귀속한다고 말한적이 없습니다. > (註 21)

여하튼 中東鐵道問題는 1924年5月31日 北京政府와 소련 사이에 조인된 <中·蘇懸案解決을 위한 大綱에 관한 協定> (註 22) 이 있는 후 兩國 國交는 정식으로 樹立되었다.

이 협정에서 中東鐵道에 관한 規定을 보면 다음과 같은 것으로 낙착되어 있다.

<……소비에트政府는 中國政府가 中國資本을 가지고 中東鐵道 및 이에 부속하는 일체의 재산을 사들이는 것을 인정한다> (註23)

다소 장항한 느낌이지만 본항에서 필자가 시도한 것은 中東鐵道問題의 역사적 처리 과정을 보려는 것이 아니라 帝政러시아에서 소비에트時代로 이행한 初期 소련의 對亞政策의 本質的 構成을 살펴 보는데 있는 것이다. 소위 社會主義政權의 國際主義的 外交原則에 기초를 둔다면 中東鐵道の 中國귀속은 당연한 것임은 말할것도 없다. 그러나 소련정권은 (1) 국가이익, (2) 국제적 제조건의 力量關係를 동시에 유리하게 고려하였다는 점은 소련 外交의 기반을 이해하는데 결정적 열쇠가 된다. 즉 자국의 이해와 국제적 역학관계가 자국에 유리한 경우 이 테올로기적 제 원칙은 뒤로 제쳐친다는 것이다.

2. 中期 소련의 對韓半島 政策

소비에트政府의 한반도에 대한 정치적 집념은 여러차례의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단 한번도 실효있는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

旧韓末時代 韓半島에 집결한 제국주의 세력 다툼속에 끼어들었으나 日本의 반대로 軍事的인 후퇴로 좌절되었고 戰後 소련軍의 진주로 그 관도 안에 赤色傀儡政府를 내세우는데까지는 일단 성공적이었으나 美国의 반대로 다시금 한반도에 대한 절대적 영향력은 감소되고 말았다. 물론 中共의 成長에도 一要因은 있는 것이지만 北方大陸勢와 南方大陸勢의 地政學的 差別이 韓半島의 절대적 偏向을 용납하지 않은 탓도 있다. 이점을 감안하고 세계제 2차대전을 통하여 소련政府가 내세운 對韓半島 공식 입장을 검토해 갈려고 한다.

가. 戰中政策 - 알타協定

서구에서 전쟁이 한창이던 때, 소련은 아시아戰爭에 대하여 中立的 立場을 내세우고 있었다.

1941年 4月 13日 체결된 日·蘇不可侵條約이 겨냥하는 바는 日本으로 하여금 소비에트 國境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地域에서 전쟁에 허덕이도록 하는것은 소련쪽에서 볼때 바람직한 일이라는데 맞춘 것이다.

또 소련 쪽에서 볼때 아직 社會主義建設에 손도 대지 못한채, 獨逸軍의 侵略을 받고 있는터에 極東에서 日本軍과 전쟁에 들어간다

線이 종결한 후 2月 또는 3月以内に 소련이 다음 條件에 의하여 연합국에 참가하여 对日戰에 참가한 것을 협정하였다.

1. 外蒙古(蒙古人民共和国)의 현상을 유지한다.
2. 1904年の 日本의 背信的 攻撃에 의하여 침해된 소련의 諸 權利를 다음과 같이 回收한다.
 - (a) 華太南部 및 이에 인접하는 一切島嶼를 소련에 반환한다.
 - (b) 大連商港을 국제화하고 同港에 대한 소련의 우선적 이익을 보장하고 또한 소련 海軍基地로서 旅順港의 租借權을 회복한다.
 - (c) 東清鐵道 및 大連에 出口를 두는 南滿州鐵道는 中·蘇合辦會社의 설립에 의하여 共同運營한다. 但, 소련의 우선적 이익을 보장하고 또한 中國이 만주에 있어서의 완전한 主權을 保有하는 것으로 한다.
3. 千島列島를 소련에 인도한다.

前記의 外蒙古, 港灣 및 철도에 관한 협정은 蔣介石總統의 同意를 요하는 것으로 하고 미국 대통령은 스탈린元帥로부터의 권고에 의하여 右의 동의를 얻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3 國政府 首腦는 소련의 右項 要求가 日本敗北後에 있어 확실히 실시되어야 함을 협정했다. 소련은 中國을 日本의 속박에서 해방하는 목적을 가지고 자기의 군대에 의하여 中화민국에 원조를 주기 위하여 소비에트社會主義共和國連邦과 中華民國사이의 友好同盟條約을 中화민국 정부와 체결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한다. (註26)

이와 같은 영성한 비밀협정이 이루어진 이면에는 루즈벨트의

문제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에서 러시아는 미국에 대해 미군의 한반도 주둔가능성을 문의한바 미국의 답변은 日本 本土上陸後가 아니면 実行可能性이 없다는 것이었다.^(註29) 따라서 韓半島는 소비에트軍에 할당된 作戰戰域에 전부 포함되고 말았다. 8月8日 포츠담宣言에 가맹할 것을 성명하고 카이로宣言을 확인했다. 소련政府는 다시 한국에 대한 4개국 信託統治原則과 한국은 최종적으로 독립된다는 견해를 確認했다.

한반도에 대한 소련의 軍事行動은 8月12日 元山에 上陸함으로써 시작되었다. 38線은 맥아더가 발표한 日本 항복에 관한 一般命令 第1号에 논거를 두고 있다. 어떤 政治的인 고려에서라기보다 순전한 군사적은 기초에서 마련된 것이 맥아더의 一般命令 第1号라고 한다. 美國政府의 비교적 底級레벨에서 작성되었다는 것이 아니냐는 설^(註30)도 있지만 여하튼 전쟁이 끝나고 보니 38度線上에서 미군과 소련군이 마주보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

당시의 설명을 빌면^(註31) 미국政府가 맥아더 一般命令 第1号草案을 스탈린에게 수교하였으나 만주에서의 日本軍의 저항이 이의로 강력하였기 때문에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나. 戰後政策

世界第2次大戰後 소련軍이 한반도의 38선 이북에 진주하여 그들의 衛星政權을 세우고 한반도의 완전한 赤化를 달성하려던 시기에 일어난 여러가지 사대발전에 관해서는 본고에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 다만 전후 한국문제 처리에 있어 소련의 의증이 가장 잘 나타난 모스크바 3相會議決定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전후 소련

관한 많은 同一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용되게 될 것이다> (註33)

또 이즈베스차 記事도 이 信託統治는 소비에트와 미국의 한국에 관한 급속한 經濟復興과 政治上의 안정을 최후한다는 정책상의 협조 결과로 확신한다고 논평하였다. (註34)

모스크바 3相會議의 결정사항을 실행하기 위하여 한국의 兩司令部 代表들은 1946年 1月 16日 서울에서 共同委員會를 개최하였다. 73名の 대표가 그 전날 서울에 도착했다. 미국측은 임시정부 수립문제 보다 앞서 한국경계의 통일문제를 심의할 것을 희망했다. 그때문에 미국측은, 철도와 기타 통신기관 및 電力의 통일된 운용과 함께 은행업무, 通貨, 通商에 대한 통일있는 諸政策, 상품의 자유로운 流通과 兩地域間에 特定人の 교류를 확립할것과 無防備狀態로 방치되어 있는 38度線을 따라 雙方이 支配可能한 地帶를 건설할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소비에트側은 特定項目만을 즉 電力의 供給, 鐵道와 道路에 의한 兩地域間의 交通再建같은 문제만을 심의할 것을 원했다. 시설을 연합하여 운영할것을 고려한것은 北朝鮮에서의 절대적인 소비에트의 지배를 침해하는 것임으로 拒否되었다. 미국측의 대표가 南韓은 전쟁중의 비료의 부족과 북한으로부터의 피난민 격증으로 인하여 쌀 供給에 난점을 지적하자 소련 代表는 이 회의의 의제로서의 通商交換의 문제를 除外했다. 3週間の 토의 결과 교통과 兩司令部間의 연락에 관한 한정된 협정을 체결했으나, 그후 미국측이 이 한정된 협정일지라도 이행하려 몇번인가 시도해 보았지만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 이 회의는 우편물과 小數의 軍事連絡班의 斷統的인 交換으로 끝났을 뿐이다. (註35)

그러나 이 제한된 兩側의 교류관계도 소련軍側의 一方的인 遮斷으로 아주 잘려 버리고 말았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관한 많은 同一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용되게 될 것이다> (註33)

또 이즈베스차 記事도 이 信託統治는 소비에트와 미국의 한국에 관한 급속한 經濟復興과 政治上의 안정을 회복한다는 정책상의 협조 결과로 확신한다고 논평하였다. (註34)

모스크바 3相會議의 결정사항을 실행하기 위하여 한국의 兩司令部 代表들은 1946年 1月 16日 서울에서 共同委員會를 개최하였다. 73名의 대표가 그 전날 서울에 도착했다. 미국측은 임시정부 수립문제 보다 앞서 한국경제의 통일문제를 심의할 것을 희망했다. 그 때문에 미국측은, 철도와 기타 통신기관 및 電力의 통일된 운용과 함께 은행업무, 通貨, 通商에 대한 통일있는 諸政策, 상품의 자유로운 流通과 兩地域間에 特定人의 교류를 확립할 것과 無防備狀態로 방치되어 있는 38度線을 따라 雙方이 支配可能한 地帶를 건설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소비에트側은 特定項目만을 즉 電力의 供給, 鐵道와 道路에 의한 兩地域間의 交通再建같은 문제만을 심의할 것을 원했다. 시설을 연합하여 운영할 것을 고려한 것은 北朝鮮에서의 절대적인 소비에트의 지배를 철폐하는 것임으로 拒否되었다. 미국측의 대표가 南韓은 전쟁중의 비료의 부족과 북한으로부터의 피난민 격증으로 인하여 쌀 供給에 난점을 지적하자 소련 代表는 이 회의의 의제로서의 通商交換의 문제를 除外했다. 3週間の 토의 결과 교통과 兩司令部間의 연락에 관한 한정된 협정을 체결했으나, 그후 미국측이 이 한정된 협정일지라도 이행하려 몇번인가 시도해 보았지만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 이 회의는 우편물과 小數의 軍事連絡班의 斷統的인 交換으로 끝났을 뿐이다. (註35)

그러나 이 제한된 兩側의 교류관계도 소련軍側의 一方的인 遮斷으로 아주 잘려 버리고 말았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韓半島政策은 당연한 理論的 結果라 할 수 있다. 이 사실은 1953년 한국전쟁이 유엔軍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한 局面으로 전환하자 소련은 分斷可能線에서 다시금 休戰을 갖게 함으로써 韓半島의 休戰線 北方에 대한 安全을 도모한 점으로 보아 입증되는 터이다.

- (註17) 山本 登 編, 中ソ対立と アジア諸国 (上) > (日本国際問題
研究所 1969), p. 19.
- (註18) Jane Degras, OP. Cit., pp. 215.
- (註19) Allen S. Whiting, Soviet Policies in China, 1917~
1924 (Stanford, 1968), pp. 28~29.
- (註20) Jane Degras, OP. cit., pp. 159~160.
- (註21) The China Year Book, 1924~5, p. 875
- (註22) 요페 (Joffe) 의 교섭 (中東鐵道無償返還問題) 이 실패한후
카라한이 직접 北京에 파견되어 체결한 것임.
- (註23) 協定第9條
- (註24) Memoirs of Cordell Hall (London, Hodder & Stoughton,
1948)
- (註25) John R. Deane, The Strange Alliance (New York
Viking Press, 1947), p. 226.
- (註26) 東亞日報社安保統一問題調査研究会編, 安保統一問題基本資料集,
1971.
- (註27) A. L. Grey, jun., <The 38th Parallel>, Foreign
Affairs, April, 1951.
G. M. McCune, Korea Today, (London, Allen and
Unwin for IPR, 1950), p. 43.
- (註28) Sherwood, White House Papers, ii 857
- (註29) US House of Representatives, Committee on Foreign
Affairs,
- (註30) Max Beloff. (石川忠雄, 小谷秀二郎 共訳), ソヴィエトの
アジア政策, 日本外政学会, 1957, p. 254~255.
- (註31) 同上

Ⅱ . 多極化時代와 強大國政策

Ⅱ . 多極化時代와 強大國政策

닉슨 美國大統領은 1970年 國會 敎書의 對外政策報告에서 國際政治에 對한 美國의 役割을 다음과 같이 說明하였다.

<...美國의 中心的인 役割없이 是係의 平和와 進歩는 不可能하다> (註1)

이와 같은 表現은 兩極時代에서의 國際警察力量을 자처했던 때와는 꽤 거리가 먼것이라 하겠다.

또 그는 새時代의 의미를:

<國際關係에서의 戰後時期는 끝났다>고 규정하면서, <새時代는 모든 先進的 勢力의 중심이 되는 歐洲(특히 西歐)와 日本의 資源이 새로운 國際秩序를 樹立하는데 공동(美國과)으로 投與되어야 한다> (註2) 고 주장했다.

이는 美國의 獨舞台였던 <戰後時期> — 1960年代初半까지의 國際政治的 性格에 對한 再評價를 뜻하는 것이다.

즉 美國의 國際能力의 限界點을 스스로 認定한 것이며 더 이상의 <積極的인 조정>이나 <直接的이며 軍事的인 介入>政策을 부인한 말이다.

그리고 또 하나 重要한것은 地球의 西半歐에서의 美國의 主要 同盟勢力으로는 西歐를 지지하고 東半歐에서는 日本을 美國의 同盟勢力으로 불들어 매어 두려는 집착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國際秩序의 多極化 趨勢를 인정하고 美國의 현실적 力量을 시인하고는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美國의 國際的인 役割을 積極的으로 내세우면서 그 同盟勢力의 범주를 明白하게 긋고 있다는 것은

1 . 國際政治와 強大國

70年代 國際政治의 特徵 가운데 하나는 軍事的으로는 美國과 소련의 兩極性이 그대로 存在하는데도 不拘하고 政治的으로는 多極化가 広範하게 推進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政治的 多極化가 促進되면 될 수록 軍事的 兩極性은 의미를 잃어 간다는데 70年代 國際政治의 性格的 展望을 可能케 한다. 더구나 政治的 多極化의 背景이 東西冷戰構造의 와해 美·蘇 兩大國의 各各 自己陣營에 대한 支配統制力의 쇠퇴라는데 있다고 본다면 한층 뚜렷한 可能性을 發見할 수 있게 된다. 한 마디로 말해 現代 國際政治上의 問題는 現實的인 多極化 過渡期이 어떠한 行程을 거쳐 進行될 것이며 어떤 種類의 過渡期을 갖느냐는 問題와 強大國의 役割 또는 強大國의 政策傾向이 어떠한 性格을 띠게 될 것이냐는 設問에 대한 正當한 解答을 마련하는 일이다.

먼저 향후 國際政治의 흐름이 <多極化>란 制限된 概念속에 完全히 表現될 수 있는가 하는 問題이다. 앞서도 말한바와 같이 <多極化의 背景은 兩極性 強大國이 第3者의 發言權 增大로 불려 支配가 劃一性을 잃은 結果로 나타난 現象이란다면 이를 다른 말로 表現해 國際勢力의 均衡이 이미 破壞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國際政治의 깨어진 平衡을 自己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再調整하려는 強大國의 執念이 있음직 하고 또 잠재 強大國에 의한 저항도 發生할만 하다. 破壞된 均衡에는 真空狀態가 생기게 마련이고 이 真空狀態는 곧 새로운 形態의 勢力에 의해 補填되게 마련이다. 이 새로운 形態의 勢力이란 기존 強大國 — 기존 질서일 수도 있고 새로운 잠재 強大國에 의한

話를 잇는 外交姿勢로 轉換하여 소위 <恐怖의 均衡>을 이루었는 바 이것은 初期 <平和共存>의 形態였다.

이 당시의 特徵은 美国과 蘇聯의 한쪽으로는 협력하면서도 다른 한쪽으로는 의연히 抗争을 繼續하는 兩面性을 띠고 있었다는 데 두고 있다.

쿠바 危機를 契機로 하여 核実験部分停止, 核拡散防止 등 兩條約을 거쳐 戰略核武器 削減交渉에 이은 協力關係의 展開가 보이는 반면 中東紛爭이나 베트남戰爭에 있어서는 의연히 對立이 繼續되고 있는 터이다. 그러나 時代的 엑센트는 여하튼 對立에서 보다 相互協力에 두고 있음은 明白하였다.

大勢는 平和共存이 定着하는 方向으로 進行되었던 것으로서 말하자면 人工的 信賴 (Synthetic Trust)가 構築되었던 狀態였다. 問題는 美·蘇의 信賴關係가 人工的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不自然스러운 것이었고 日·美 또는 英·美처럼 自然的인 信賴關係가 없었다는 데 있었다. 당시 美·蘇兩國은 協力關係를 重視하면서도 諸各其 全力을 경주하여 戰略核軍備를 增強해 갔었다는 사실이 바로 이를 뒷받침 해주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美·蘇關係의 平和共存的 進展은 우발사고가 아니한 美国과 蘇聯間의 戰爭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새로운 國際通念을 낳으면서부터 自然히 緊張緩和의 무드가 拡散되기에 이르렀다.

緊張緩和는 歐洲에서부터 시작되었다. 冷戰이 시작된 곳도 구주였기 때문에 冷戰의 終末 또한 歐洲로부터 시작됨이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西歐社會에서는 蘇聯이 침공해 올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결이다. 西歐側에서는 NATO를 無用之長物로 보기 시작하고 東歐側에서는 바르샤바同盟을 <맑은 날씨에 우산> 격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東西다같이 軍事的 結束이 해이해지고 美·蘇의 國際政治的 意志는 充分히 존중되지 못한다. 이하하여 軍事 兩極과 政治多極化의 情勢가 조성되는 것이다. 東西兩同盟이 다같이 이른바 <岐路>에 서 있으나 닉슨大統領은 2月19日의 通稱 外交文書(1970年代의 美國의 外交政策)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70年代 美國과 歐洲關係를 再檢討할 시기가 到來하였다. 새로운 사태에 効果的으로 適應하기 위해서는 NATO를 어떤 同盟으로 바꾸어 놓으면 좋을 것인가?> (註3)

이와 같은 設問끝에 ;

<西歐의 活力과 獨立을 반영할 相互協力(Mutual Partnership)으로 進化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註4)고 自答하고 있다.

닉슨 就任後의 最初의 外遊가 西歐友邦訪問이었음을 보아도 示唆되는바와 같이 美國政府는 현저한 低姿勢로 西歐諸國의 뜻에 迎合하려 努力하고 있다.

NATO가 결성된 4半世記前은 고사하고 널레스 外交時代만 比較해도 今昔之感이 깊은바 있다.

이와 같은 美國의 低姿勢 外交가 시작된 동기가 EEC의 發展으로 西歐諸國이 번영과 자신을 回復한 結果로서 自然히 美國의 의 존으로부터 탈출하여 급기야는 美國에 대한 發言權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이로 미루어 본다면 國際情勢의 多極化 行程은 당초 經濟的 自立이 政治的 속크를 주어서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고

것이다. 단지 自由世界는 자유로운 多極化 現象이 可能하나, 非自由世界는 軍事的 兩極性 때문에 방해를 받는다.

蘇聯은 自国内에서 許容되고 있는 限度以上으로 東歐諸國에 自由를 용인하려 하지 않는다. 捷코事態의 비극은 그 適例라 않을 수 없다. 美國이 닉슨·독트린을 제창하여 友邦의 自主性을 支援하는 外交的 形態를 取하여 多極化的 國際情勢에 効果적으로 適應하려 하는데 반해 蘇聯은 브레즈네프·독트린을 제창하여 衛星勢力에 대해 크레프린의 意思를 강제해 보려 한다. 그러나 東西를 불문하고 多極化 경향은 世界大勢로 되어 있어 이를 방지하려함은 시제 바늘을 꺼꾸로 돌리려는 行為와 비슷한 것이다.

蘇聯은 歐洲에서 歐洲安全保障會議를 제안하고 있고 아시아에서는 <아시아集團 安保構想>이란 걸 내밀고 있는바 이는 歐洲의 緊張緩和를 얻어 아시아에서의 中共 및 太平洋勢力과 効果적으로 대결하기 위한 수책인 것이다. 그러나 그 結果로서 대두될것은 歐洲—東歐의 多極化 現象을 促進하는 것일 것이다.

따라서 向後 國際情勢의 추이는 強大國이나 弱少國이나를 막론하고 多極化란 큰 흐름에 어떻게 効果적으로 自國政策을 適應시키는 가 하는 問題가 國家政策 樹立에 中心的 과제로 될 것이다.

나. 列強政治理論의 再抬頭와 아시아

國際政治上 強大國이라 함은 他國에 대한 影響力의 大小를 측정하여 나온 相對的인 概念을 말한다 하겠다.

그러나 여기서 問題삼고자 하는것은 弱少國에 대한 強大國의 國際政治的 作用을 말한다. 비록 多極化 姿勢가 廣範하게 世界에

약간 變貌되었지만 당시의 強大國들이 즐겨 집행하였던 強大國 協商이란 外交形態가 復活하고 있는 側面을 보는듯 하다는 것이 現代 저널리즘의 表現이다.

이는 확실히 國際政治學 分野에서도 다루고 지나가야 할 장르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 당시의 열강 간의 協商은 어떤 形態의 內容인가?

그 당시의 強大國 政策은 (1) 積極的인 自國利益의 追求, (2) 他強大國에 대한 弱少國利益의 희생 등으로 大別되었다.

이는 19世紀 旧韓末 韓半島에 대한 美國의 政策을 보면 알 수 있다. 中國에 대한 權益保持 때문에 日本의 韓國支配를 일방적으로 방치한 歷史的 通例가 있다. 오늘날 美國은 아시아에 대한 亞美利칸 프레스스 保持와 太平洋에 대한 政策的 이해관계 때문에 弱少國家의 主權防衛問題는 아랑곳 없이 中共과 協商하고 있다. 그 結果는 아무리 따져도 韓國이나 自由中國 및 其他 東南亞 諸國에 유리한 局面으로는 되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에는 드골의 경우 처럼 자기것을 가졌을 때에는 效果的으로 情勢에 便乘하면 유리한 他局面도 고려될 수 있는 兩面性이 存在한다)

어쨌든 強大國의 國家利益 追求는 예나 지금이나 다른바 없다.

우선 아시아政勢의 基本狀況을 把握하면서 國際政治上의 列強政策을 읽어 보자.

흔히들 아시아는 世界의 變두리라고 한다. 이 점은 共產主義者들이 만든 戰略地圖에서도 共通點을 發見할 수 있다. 즉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프리카란 地域意識을 政治的으로 着色하여 하나의 戰略地圖를 만든것이 다름 아닌 共產主義者들인 것이다.

그러나 이 世界의 變두리가 갖는 客觀的인 意味는 그리 단순한

장 약한 고리(環)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소위 3 A地域이 선택되었음을 뜻하는 것이다. 가장 좋은 본보기로 中共의 中間地帶란 對外戰略理論이 있고 蘇聯의 物質的 接近을 통해 설정되는 該当地域國家의 上部構造(國家理念, 경제건설 이론, 法律思想體系 등)의 自己化란 積極정책이 있다.

세계 영국 방식의 變두리政策(勢力圈의 형성 및 유지)은 역시 分離와 支配의 原則的인 코스로 아시아, 아프리카地域의 紛糾를 일삼아 왔는바 과거에는 東洋史發展에 癌的 存在로 불리워 온 터였다.

어쨌든 이들 強大國의 아시政策基盤은 積極的 또는 消極的이라는 차이는 있을 지언정 自己勢力圈形成이란 需要위에서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는 사실이다. 단지 이 勢力圈이 既成勢力主体의 積極적인 防衛行爲가 過剩防衛段階로 移行한다던가 또는 新生勢力主体가 既成勢力圈에 대해 積極적인 浸透 및 현상타파 세력화 되는 과정이 서로 兩立될 수 없는 敵對的 成分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아시아, 아프리카 變두리는 일방적인 희생과 피해를 甘受해야만 할 기본적인 問題狀況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變두리>弱少國에 대한 強大國의 정책상 또 하나의 기본상황은 變두리 自体가 갖고 있는 非統一性이다. 이는 集團利益을 가로 막는 그리고 스스로의 자주성을 가로 막는 요인이기도 하다. 이는 기왕에 자기 소속돼 있던 세력권의 영향이 獨占的으로 扶植해 놓은 對立關係의 소산이다. 심지어 위에서도 본파와 같이 中心政策의 하나로 <分離와 支配>原則을 적용한 強大國의 犯罪的인 歷史도 있다. 따라서 이들 諸從屬勢力의 그 成長의 자연스런 歸結으로서 자기가 종속하였던 既成勢力의 代弁者 口實을 떠맡지 않으면

2. 아시아의 未來에 대한 可能性과 強대국政策의 패턴

아시아의 未來에 대한 可能性을 나열하는데 있어, 어두운 側面에 관한 몇가지 요인은 이미 지론하였다. 그것에 부가하여 또 하나의 기본적 상황을 찾아 보면, 아시아를 대표하는 共通性의 欠如라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아시아의 土着的 勢力으로 커갈 수 있는 集約된 아시아의 표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肯定的인 아시아戰略의 不在現象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日本은 西歐의 一部이며 中國은 冷戰構造의 극단적인 說明이며 東南亞의 自覺은 아시아란 非生産性 모목에 우스강스런 混合民主主義를 접해 놓은 것 같은 말하자면 土着的인 狀況에 生명을 넣은 가치 있는 발전과는 거리가 먼 自覺形態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雜多한 基本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문제 삼아야 할 것은 아시아의 自覺形態인 것이다. 맹목적인 既成觀念에서 벗어나 자주적이며 독자적인 이데올로기의 발전을 도모하자면, 맨 먼저 共產主義란 單一이데올로기의 戰鬪的 挑戰을 받아들여야 하고 이것이 커다란 障壁으로 될 때 좌절되기가 일수였다. 그러나 오랜 過渡期를 경과하는 동안 이 자각형태는 상호 공통성을 넓히게 되었고 하나의 통일성을 기하려는 조직적 연대관계를 指向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아시아의 強대에 비록 호릿하나마 하나의 <可能性>을 주게 됨으로써 앞서 말한 強대국 또는 勢力主義에 바탕을 둔 <아시아적 평가>에 중대한 수정을 촉진케 하는데 어느정도 성공하게 되었다. 영국은 大英帝國의 屬邦이었던 新生國에 대해 독립을 주는 대신 그 反對給付로서 新생국을 對영제국 연방속에 비껴어 버려 두려는 것 만으로도 하나의 外交的 成果로 인정하기에 이르렀고

않는 限, 美國의 아시아政策 必役者 구실을 받는데 가장 合理的인 정책 범위가 된다. 日本은 그 자신의 세력권을 가질 수 없는 처지이다. (戰略理論上의 의미) 비록 經濟大國으로서 超情報社會 (Super Industrialized Society)를 건설하는 데는 앞장서고 있으나 國家指向이 뚜렷한 指導理念도 없고 확고한 국제신뢰도 얻지 못하고 있다. 最近한 예로 69年11月21日付로 발표된 日本首相 左藤와 닉슨美大統領의 共同聲明과 그 후의 對中共政策에서의 日本이 보여준 國家路線은 완전히 상반된 것이었다.

위의 共同聲明에서, <韓國의 安全은 日本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있어 중요한 것>이라고 말한 다음 台灣地域에 있어서의 平和와 安全의 유지도 日本의 안전보장에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함으로써 읍새버들은 대만과 한국에 대한 <介入宣言>이라고 규정케 했던 것이다.

그러나 1971年 中共에 대한 美國의 평평外交가 활발한 展開를 보이자 초조해진 日本은 右往左往 종전의 公約을 통채로 擯棄된 듯한 政策以前의 추태를 보인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만일 이러한 日本이 과거의 大東亞共榮圈과 같은 帝國主義的 國家目標을 설정하고 그 실천방도로서 軍國主義化 경향을 띠게 된다면 전체 아시아 국가의 전면적인 不信을 초래, 오히려 自由陣營에 불리한 현상을 보편화시킬 공산이 더 큰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日本은 크게 보아 영국의 그것처럼 西歐의 一部이며 美國의 必役者로서의 구실 이상의 역할은 할 수 없는 처지인 것이고 미국에 대해 일본 자신의 이익을 방위하거나 추구하기 위해 對立的 立場을 가진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요원한 展望에 속함으로 本稿에서는 아시아에서의 미국, 소련 및 中공의 적극적인 對立關係를 해쳐 보는 이른바

소련은 전기 平和移行論原則에 立脚한 소위 <平和競争>을 통해 결정적인 우위가 명백해질 때까지 共存한다는 이론바, <戰術的次元>의 것이다. 따라서 소련의 平和共存原則은 國際的 視野에서의 階級鬭爭戰術로서 인식하는 것이고 周邊國家의 親中共路線의 강요를 의미하는 中共의 <平和5原則>은 敵對社會(美國 등) 支配層까지도 전쟁세력과 平和努力으로 分斷, 戰爭努力(대과)을 고집시키려는 철저한 戰略的 意味로 채워져 있다. 언제나 약한 고리(環)를 찾아 帝國主義의 急所를 치며 그 局部的 急所들을 연결시켜 致命的 打撃으로 擴大해 나간다는 것이 中共의 中間地帶戰略이며 세계의 農村地帶가 세계의 都市地帶를 포위 섬멸하는 相對抹殺主義인 것이다. (註7)

이와 관련하여 이들 3세력의 南北問題觀을 보자.

약간의 전술적인 차이는 있지만 相互協力體制를 통해, 가진 나라(北)와 못가진 나라(南) 사이의 격차를 平準化 해 보자는 것이 미국이나 소련의 계의(비록 表面的인 것일지라도)라고 한다면 中共의 그것은 世界의 後進有色地帶가 잔존해 갈려면 世界의 先進白色地帶를 포위 섬멸해야 된다고 드러내 놓고 주장한다. (註8)

따라서 이데올로기의 3角的 對立現象은 國家利益의 追求面에서도 3角的 對立關係로 되는 것이다.

둘째 國家利益의 문제이다.

아시아에 있어서 美國, 소련, 中共의 3角關係는 地理上의 關係에서가 아닌 政治上의 의미에 그 핵심이 있다.

3角關係의 本質의 하나는 兩者가 接近하려는 것을 제3자가 싫어한다는 점이다. 3者中 兩者가 結탁하거나 敵視關係를 맺게 한다면 3者間의 <힘의 均衡>은 깨어진다.

와 지도의 차이가 미, 소, 中共 3角關係의 對立的 利害關係의 주변을 이루는 원형질이 된다. 그래서 이들 主觀的 前提들을 客觀化하여 보면 미국의 아시아에서의 국가이익 유지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아시아에서의 超大國으로서의 地位를 現狀維持한다는 것이다. 좋게 말하나 나쁘게 말하나 미국은 太平洋을 미국과 캐너더 사이에 있는 한 개의 호수 정도로 생각한다. 即 방위적인 측면과 공격적인 측면 어느것이든 간섭적이란 의미이다.

다음은 이와같은 아시아에서의 特權的 地位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單一挑戰勢力이 등장하지 않음으로써 보장된다. 과거 日本은 스스로 도전하여 打倒되었지만 中共은 日本의 前轍을 밟지 않음으로써 미국의 巨大한 軍力과 경제력에 의해 봉쇄 당한 것이다.

그리고 좀 특이한 국면으로 되는 터이지만 中共이, 傳統的인 資本主義 文明과 미국의 세계전략에 위협적인 존재로 방치되어 있다고 미국이 인식한다는 점이다. 즉 中共이 西方의 資本主義 文明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면서 성장해 왔다는 점을 중시한다는 것이다. 이 점은 미국에게도 약간의 책임이 있다. 미국은 反共指導者나 反共政權에 대해서만 祝福하는 정책을 일관해 온것이 결국은 아시아를 拮一型으로 만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아시아에서의 既得權 상실을 곧 패배로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소련의 國家利益 追求方法은 어떤 것인가?

첫째 아시아 국가로서의 安全保障이 문제된다. 이 문제에 관한 완전한 회답은 아시아 및 太平洋地域에 대한 親蘇 벨트의 構築과 소련影響圈 형성에서 얻을 수 있다.

共存的 側面이 강조되는 경우는 미·소의 핵무기 위협이 쌍방에
절실하게 전달되었을 때와, 미국과 소련의 優位立場이 지속되는데
필요한 諸般措置 등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위 두가지 케이스를
除外하면 冷戰構造속에서 對立하게 된다. 예를 들면 中東에서와
같다. (歐洲에서는 共存), 미국은 中·소對立의 表面化순간부터
中·소和解를 두려워 했다.

미·소接近은 中共의 희생 위에서만 이룩될 수 있었고(아시아
에서), 胡志明死亡을 계기로 나타난바 있었던 中·소和解氣運에 제
일 심각한 신경을 곤두 세웠던 곳은 워싱턴이었다. 그리고 미국
과 中共의 평통외교에 필적 된곳은 모스크바였음을 상기하면 이
들 3角關係의 본질적 의미를 파악하는데 매우 흥미 있는 자료가
된다. 中東에서처럼 中共의 영향력이 비교적 미약할 수 밖에
없는 곳에서는 미·소의 대립정책이 表面化되고 있으나, 그 영향력
이 강대한 지역에서는 미·소協調가 비교적 스무드한 것을 볼 수
있다. 직접적으로는 미국의 월남전쟁은 華南에 中共軍을 묶어두고
견제한 꼴이 되어 中·소國境에 安定이 있었다면 소련에게는 오히
려 미국의 越南장클 苦行은 바람직한 사실이 되는 터이다.

만일 미국과 中共關係에서 共存構造가 가능한 것이 있다고 하면
對日, 對소관계의 경우에는 가능하다.

東南亞를 포함한 中共의 本質的인 既得權 처리에는 對立關係만
남게 된다. 역시 소련과 中共關係도 형식적인 이데올로기적 측면
만 除去된다면 소련과 中共關係는 철저한 적대관계 만이 남게
된다.

이상에서 우리는 강대국 정책의 새 패턴으로서 다음과 같은 점
을 중점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

대한 적극적인 侵奪가 있을 수 없다는 뜻도 된다. 따라서 미처 解氷무우드의 政治的 의미를 단속 못했다면 그 조직적 전개에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東西對立體制 속에 있는 弱少國의 이익은 전적으로 존중될 수 없는 것이 된다.

다. 내셔널 프레젠스(National Presence)의 과시

전항에서 이미 내셔널 프레젠스에 관해 구체적으로 상술한바 있다.

미국의 政治, 경제, 軍事的 이익은 태평양에 대한 支配能力의 과시가 필요하다. 소련의 그것도 印度洋 및 太平洋에 대한 國力의 과시가 아시아國家政策指向에 유리하다.

이와 같은 太平洋勢力과 아시아勢力의 숙명적인 대립관계는 평화 공존적 政策指向과 세력균형의 철저한 현상유지 속에서만이 폭발되지 않을 수 있다. 바로 이러한 現狀存立의 가능성 속에서 약소국의 自活的 政策進路가 모색되어져야 할 것이다.

Ⅲ. 韓國의 對蘇 平和外交方案

Ⅲ. 韓國의 對소平和外交 方案

國際政治에서 이른바 <眞正한 同盟도 존재하지 않고 진정한 적대국도 존재할 수 없다>는 말과 <自國을 除外한 모든 국가가 假想의 敵國이다>란 말은 상호 모순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同曲異巧에 지나지 않는다.

<脫이데올로기>가 云謂되고 國際的 多極化情勢에 효과적으로 反應해야 한다는 政策的 命題앞에서 볼때 소련과 韓國의 關係는 當然히 改善되어야 한다는 結論이 가능한 것이다. 歷史적으로 보아 韓國과 소련의 關係는 中國(中共)과 소련의 關係 보다 柔然한 것이었다는게 事實이다. 中共과 소련사이에는 이데올로기만 제거하면 철저한 적대 關係만이 남을 수 있으나 韓國과 소련 關係는 이데올로기를 제거한 상태라면 심각한 적대 關係란 존재하지 않는다.(상대적 의미)는게 일방적인 觀點이다.

단지 하나의 문제는 北韓의 현실적인 존재를 인식해야 한다는데 있다. 소련과 同一體系의 地政學的 可致性과 이데올로기의 同質性을 가진 北韓의 政治的 存在를 韓國으로서는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政治는 현실이며 現實에 대한 도전은 가능성을 남겨 마련이다.

西獨 브란트의 東方政策은 東獨의 존재를 초월하여 소련과의 關係를 改善하였는가 하면 中共의 포발 구실을 하는 소위 3A地域에 대한 北韓의 政治的 浸透는 事實상 보잘것 없다는게 專門家들의 견해이다.

이와같은 現實을 중시하고 현실속에 존재하는 可能性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國家利益의 幅을 넓혀나가는 것이 현대 국제정치의 모델이 된다는 事實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마트비에프 論說委員) 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당시 이 文章은 1971年이 되면 英國軍의 東南亞 및 西南亞
철수로 인해 예견되는 眞空狀態를 적극적으로 메워야 한다고 주장
했다. 아울러 동남아 및 중앙아시아에 존재하는 각종 軍事條約機構
는 有名無實하게 된다고 분석하면서 이 일대의 세력은 世界戰略体
制中 하나의 眞空地帶로 되는바 소련은 이들 지역의 諸國이 스스
로 떠맡고 나오는 集團安全保障制度를 지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 글에는 그렇게 함으로써 美國이나 英國을 대신하여 진출
하려는 오스트렐리아, 日本등이 이들 진공지대로 침투하려는 기도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글이 발표된지 얼마 안되어 소련 공산당 서기장 브레즈네프
는 모스크바에서 열린 國際共產黨大會 1967年6月7日 會議에서
정식으로 다음과 같이 아시아集團安全保障体系를 제의했다.

<事態進展은 아시아集團安全体系에 관한 토의를 日程에 이미
올리게 하였다.>

곧이어 소련 外務省은 긴급명령을 발하여 駐美大使, 駐中供大使를
비롯하여 印度, 파키스탄, 네팔, 캄보디아, 세이론, 라오스, 태국, 버마
日本, 오스트렐리아 등 10餘國家의 使節을 召喚, 情勢報告를 하도
록 지시했다. (註1)

前記 마트비에프의 論說을 중심으로 당시 소련의 신문, 잡지에
나타난 아시아政策의 새로운 움직임을 살펴보자

<소련의 아시아 아프리카外交의 基調는

(1) 民族解放運動을 支援하며

(2) 發展途上國과의 協力を 추진하는것 >이라고 내세운다. (註2)

할 수 있다. 이는 커꾸로 美·中共接近을 촉진한 역할도 하였을 것이다. 당시 (69.2) 미국과 중공의 바르샤바會談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미국과 중공의 접근이 不可避한 현실로 내다 볼 소련의 위구심을 다음과 같이 읽을 수 있다.

<워싱턴은 모스크바와 北京의 사이를 離間, 결국은 極東에서의 미국의 입장을 강화하는 방편으로 北京과 모종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 바르샤바會談에서는 베트남問題가 흥정되었을 것으로 간주된다> (註 3)

<로저스 國務長官은 방콕에서 열린 SEATO 理事會에서 美國은 北京과의 관계를改善하고 싶다고 말했다. 당장 그렇게 되리라고는 보여지지 않지만 조만간 北京에 接近하려 기도할 것임을 거의 확실하다> (註 4)

이러한 위구심을 바탕으로한 소련의 아시아政策이 바로 <新植民主義로부터 아시아의 民族的 獨立을 지켜주기 위해 友好, 同權, 相互원조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集團安保體制라는 것이다. 따라서 소련은 아시아政策의 기본사향으로서 經濟援助中心의 外交攻勢를 전개한 것이었다.

아프가니스탄은 소련政府를 최초로 승인한 국가란 점에서 특별한 국가적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1969年 봄 兩國은 外交關係 50周年을 공동으로 축하한 의식을 가진바 있다. 이 나라에 대한 소련의 경제원조는 40件 (1969年현재)에 달하고 그중 26件이 수행중에 있다한다 (이미 거의 전부 완성하였을 것임) 소련의 협력을 얻어 완성한 (개스油田시설, 파이프·라인에 의해 年間 2,000만불의 外貨를 획득하고 있다. (註 5)

또 (가불에 최초의 技術專門學校가 완성되었고 시벨간에 油田開發

형태도 中共을 외식한 文化, 經濟, 軍事的인 측면을 중시하고 있다.

마레이지어 싱가포르 타이, 필리핀등 反共的이며 對美依存도가 높은 國家에 대한 소련의 자세는 이들 국가들의 월남전쟁에 대한 對美協力(태국, 필리핀)을 비난하면서도 경제면에서의 접촉에는 높은 관심을 표시하고 있다.

태국은 天然고무農産物의 對소輸出을 소련은 유리, 신문用紙 등을 태국에 수출하고 있다.

이상은 소련의 對亞政策理論의 하나인 아시아集團安保構想의 實體가 무엇인가 하는 점과 그 構想의 실질적인 推進源이랄 수 있는 경제적, 문화적, 接近方法(소련의 아시아諸國에 대한)의 형태를 알아 보았다.

즉 物質的 接近을 통해 政治的 接近 내지 군사적 연계까지 발전시키자는 것이 이른바 브레즈네프 독트린의 정신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시아集團安保>體系가 소련이 원하는 형태로 발전하자면

(1) 中共이 고립되어야 하고

(2) 日本이 美國과 대립되거나 최소한 中共과 미국의 和解勢力을 견제하는 형식이어야 할 것이다.

<아시아 極東에 있어서 日本, 美國, 中共이 결락하여 이들 3國間에 反소비에트의인 聯帶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소련의 의혹이자 경계심으로 되고 있다. 이 反소 연대관계가 형성되는 경우 아시아 極東의 諸國은 큰 영향을 받을 것이고 나아가 이 지역에서의 세력 배런스는 대번에 깨어져 소련은 완전히 고립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소련의 사고방식이다(註8)

이와 같은 소련의 우려는 한국의 (비록 가감지는 않지만) 對소

한 강력한 支援은 中共과 印度의 국경충돌에서조차 소련은 印度편에 서서 조정하였음을 보았고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등에 대한 소련의 不斷한 지원을 팔목한 바가 있다.

이들 非同盟親소國家를 소련은 平和愛好國家라고 불렀다. 이들 세력에 대한 소련의 전략적 평가를 흐르시초프의 報告에서 인용해 본다.

〈平和의 세력은 諸블럭에의 不參加를 自國의 對外政策原則으로서 선언한 一群의 平和愛好國家들이 歐洲와 아시아에서 현저히 증가되고 있다. 그결과 국제무대에는 구주와 아시아의 社會主義 및 非社會主義의 平和愛好諸國을 포괄하는 광범한 << 平和地域 >>이 이루어졌다. 이 지역은 것의 15億의 人口 즉 地球 人口의 大部分이 살고 있는 광대한 영역을 점하게 된것이다〉^(註9)

그러니까 이들 <제3세력>에 대한 소련의 政策은 이들의 國家的 成長이 소련에 對立的 性向을 갖지 않도록 하는데 집중되고 있다.

名目上에 理論이지 <아시아集團安保構想>이나 <제3세력의 承認>에서나 모두가 소련 國家利益의 최대한의 추구라는데 共通的으로 一致되고 있다.

아시아에서 既存利益을 지키기 위해서는 理念도 수단도 가리지 않는다는게 솔직한 소련의 立場이다. 예를 들면 캄보디아, 라오스 등에서는 左右兩政權과 正常的인 關係를 갖는 이른바 <두마리의 토끼 쫓기>로 어느 국면에서든지 調整役의 地位를 유지하려 한다 이러한 소련의 政策的 立場은 한국의 對소接近 政策樹立에 있어 유리한 局面으로되는 동시에 불리한 局面으로도 작용함을 看過해서는 안된다.

世界로 부터 고립시켰음은 잘 아는 現實이다.

그러나 소련의 太平洋 進出, 日本의 재대두등, 새로운 아시아의 均衡政策이 不可避하게 되자 美国은 中共의 포위망을 풀어 전세계적으로 내세우려 하고 있다. 勿論 그 限界性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은 아시아情勢에 關한 正確한 分析과 強大國의 아시아 利害關係를 客觀的으로 網羅, 그 交叉點 사이를 無害航行해 가야 하는 것이 우리 韓國의 當面 外交課題가 되는 것이다.

이미 論及된 소련의 對韓半島政策에서 떠나 最近의 韓國情勢에 對한 蘇聯의 反應을 測定해 보기로 한다.

1972年 1月 18日字 蘇聯共產黨 機關紙 푸라우다紙는 韓國 統一方案에 言及하면서, <統一問題는 外勢의 干涉에 依해서가 아니라 韓國人 自身에 依하여 그리고 戰爭의 方法이 아니라 平和的인 方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強調했다 한다. (註11)

또한 同紙는 <全民族의 커다란 관심 속에서 進行되고 있는 南北赤十字 團體들 사이의 會談을 성사시키는 것을 韓國의 平和的 統一의 有利한 분위기를 조성하게 될 것> 이라고 言及했다 한다. (註12)

여기서 注目할만 한 대목은 <外勢排除>란 傳統的 主張과 <平和的 統一方法>의 모색으로서 南北赤十字會談의 成事라고 主張한 點이다. 南韓에 美軍 기지가 存在하는 한 蘇聯과의 積極적인 接近은 지난한 問題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 南北赤十字 團體들의 會談이 <韓國의 平和的 統一에 有利한 분위기를 조성>하게 되리라는 觀點은 韓半島에서의 現狀이 외의 積極적인 政治的 시도가 바람직 하지 않다는 내심을 말해주는 케이스가 된다.

發言權／強化를 誘導하는 것이다. 軍事的 緊張緩和는 中共에게 유리한 問題이지만 政治的 緊張緩和는 소련에게 直接的인 關係가 있다. 印度半島問題 해결에서 처럼 소련의 역할이 增大되기 때문이다.

타스通信에 依하면 外勢 배제와 美國의 南韓주둔에 초점을 두고 韓國情勢를 비판한 最近論調가 소개되고 있다. (註 15)

위의 反應에서 蘇聯의 對韓關心度는,

(1) 아시아, 極東諸地域에서의 勢力均衡이 파괴되지 않는 範圍에서 南北韓協商을 期待하며,

(2) 韓國에 關한 한 美軍의 주둔이 問題狀況으로 되며 이는 對韓政策에 있어 轉轍機 구실을 한다고 인식하는 것 같다.

따라서 韓國의 對蘇接近의 限界는 극동에서의 緊張緩和, 現狀維持에 기여도에 있으며 勢力均衡에 重大한 손상이 가는 조처는 여타 강대국 立場을 고려하여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點이다.

그리고 韓國에서의 美軍의 주둔, 또는 軍사기지가 存在하는 限, 韓國의 對蘇接近을 위한 積極정책은 空轉될 可能性이 커다는 事實에 留意해야 될 것 같다.

는 것이다. 따라서 蘇聯은 革命初期의 주한 狀況에서 주변 국가에 대한 이데올로기 수출을 통해 同調벨트를 구축하는 데서 보다 자연스런 對外政策에서 國家的 實益을 추구하려 하는 것이다.

아직 원시적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로 무장된 戰鬪的 理論으로 일관하고 있는 北韓과도 이미 協商을 시도하고 있는 터에 한국이 소련과의 관계 개선에 착수했다고 해서 하등 이상할게 없다. 다만 소련의 對韓政策이 具體적으로 부각되지 않았다는 데서 또 하나의 문제가 있을 뿐이다.

또 하나, 한국으로서는 미국의 능동적 姿勢에 의한 中共과의 關係改善이 日本의 態度 여하에 따라 소련과 日本, 또는 소련과 中共 關係의 好轉이 예상될 수도 있다는 이른바 '〈逆轉, 再逆轉〉 可能性'에 對한 대책의 결여가 주는 우려를 받아 드려야 한다는 데서 적국적인 政策技術이 역제 당하고 있다.

브란트가 東方政策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먼저 NATO의 현상유지를 美國에 강력히 요구하고, 西獨의 再軍備에 신경과민에 빠져있는 소련에 대해 武力不行使宣言을 하면서 不可侵條約을 체결한 것은 소련의 一方的 要求를 무조건 수락한 꼴이 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소련, 東歐에 대한 西獨의 무력불행사 선언 교환과 국교정상화 교섭은 東獨으로 하여금 고립케 하여 마침내는 東獨으로 하여금 西獨의 東方政策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하였음은 西獨의 國家的 地位向上에 푸러스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東·西間의 基本的인 접근 패턴 속에 한국과 소련을 넣어보자.

소련의 아시아安保面에서의 한국은 政策的 需要部位에서 上位를 차지할 수 있다. 美國과 中共이 소련과 日本의 팽창을 견제하려 한다고 보는 것이 소련측 입장이라고 한다면, 소련은 우선 日本과 접근하는 것이 순서이고, 日本과 깊은 유대관계에 있는 韓國과 가능한 한의 관계개선은 매우 필요한 사항이 된다. 그러나 소련은 한국에 관한 한 좀 더 觀望的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71年 南北赤十字會談에 즈음하여 이미 取材를 위한 소련記者의 入國에 대해 문호를 개방한 바 있으며, 73年度 朴大統領의 年頭記者會見에서도 <비록 체제와 理念을 달리하는 共產國家일지라도 우리에게 敵對行爲를 하지 않는限, 協力을 擴大해 나갈 것이라고 闡明한 바 있다. 이러한 일연의 조처를 취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소련으로서는 하등의 대응 조치가 없었다. 다만 呼稱問題에서 서울政權, 南韓 (South Korea)이란 수정이 있었을 뿐이다.

패턴(나) 原則의 선언 商業的 中立主義

우선 소련은 社會主義國家라는데 착안해야 된다. 세계가 상이한 국가에 대한 소련의 정책성향은 의혹과 철저한 不信의 바탕위에 서 있다.

상대가 공산주의국가인 경우, 그들은 力量相互關係에 대해 매우 민감한 理論的 가치를 부여한다.

共產主義者가 基本的인 政策을 결정하는 경우, — 黨의 綱領이란 형태를 가지나 먼저 결정하고 넘어가는 것이 소위 <時代認識> 即 우리들 표현에 따르면 情勢判斷인 것이다. 이 정세판단의 中心이 되는 것이, 현 시점에 있어서의 革命勢力과 反革命勢力, 共產主義와 資本主義의 力量關係의 評價라는 것은 레닌以後에 일관해온 不變의 사실이다.

힘의 關係가 분명해지면 — 절대 우위 — 공산주의자는 체면도, 원칙도, 條約이나 國際的 輿論 또는 信義같은 것은 헌신짝 버리듯 하고, 侵入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또 정세판단에 있어 불명확한 경우 — 절대우위가 아닌 경우 — 역시 모든 수단을 동원 휴전 또는 平和를 선택할 능력을 가진 것이 공산주의자들이다.

호르시쇼프가 체면 불구하고 쿠바로 부터 미사일을 철거한 사실이 適例가 될 것이다. 옛날 스탈린이 그리스의 빨치산을 팽개친 것은 地中海의 制海權에 커다란 영향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를 궁지로 모는 경우 필경에는 美國과 英國의 挑戰을 招來하게 될 것이라는 판단때문에 었던 것이다. 일종의 모험주의적 경향을 경계한 조처라 하겠다.

가까운 예로 소련의 <체코介入>은 많은 전문가들의 판단을 뒤엎고 행해졌다. 전문가들은 국제여론의 반발, 국제공산주의 분열의

게 하는 현실外交의 실천을 内外에 선언해야 할 것이다. — 이것은 平和外交를 달성하는 기본원칙이 된다.

또 하나 원칙은 反共이란 상징적 이미지를 민족국가 번영과 평화적 발전 정책으로 구체적인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즉 뒤집어 말하면 민족국가 건설을 파괴하고 경제건설과 자주성을 해치는 세력에 대한 방위수단 — 抑止力으로서의 力量關係는 강조되어야 하지만 相對抹殺主義의 도구로서의 反共主義는 아니란 점을 보여야 한다. 에집트나 마레지어 같은 국가에서 공산주의 활동을 억제하고 때로는 공산주의자들을 대량 투옥하는 경우가 있어도 그것 자체가 소련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으로는 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그들의 파괴적 활동의 성격을 요해하기 때문이며 민족국가 권력의 性向을 이해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筆者는 한국의 對소(對外一般) 平和外交 展開를 위한 원칙의 하나로 商業的 中立主義(Commer - Neutralism)을 제창하는 바이다.

상업적 지향성이 있는 정책적 사항이라면 어느때, 어느국가를 박론하고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원칙이 상업적 중립주의의 表皮가 된다. 우리는 이미 東歐와의 무역관계도 부분적이지만 갖고 있다.

기타 非同盟中立主義와도 적극적인 국가관계를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목표를 실천하는 방도로서 ASPAC과 같은 국부적 이념 추구에서 과감하게 方向轉換을 시도하면서 ASEAN 같은 기구에 자진하여 뛰어들어가야 한다. ASEAN이 제창하는 東南亞中立帶論도 필요시에는 수용할수도 있는 태세를 보여야 한다. 상업적 목적이라면 領海內에 自由港을 설치할 수 있으며, 內陸에 共產國家의 수송기 여객기의 기착도 허용될 수 있어야 한다.

中共과의 대륙붕 협상 제의가 오고 가는 경우, 소련과의 해상구
계 협의가 거래될 수 있다. 남북적십자 협상의 진전에 따라 사
할린 교포문제로 우회적 접근을 이룰수도 있다.

日本과 소련, 日本과 中共, 美国과 中共이 태평양 세력균형의 유
지를 위해 적극적인 접촉을 개시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수수방관
한다는 정책을 현명치 못한 것이다. 그 적절한 시기를 찾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패턴(라) 수단 선택

対소接近의 수단으로서는 非政治的인 標榜이 앞서야 하
는 文化, 社会的 分野를 선택할 수 있다.

소련政權을 최초로 승인한 아프카니스탄을 통하여 광범한 접촉을
벌려도 좋고, 인도와 같은 나라와 적극적인 관계— 外交關係 수립
— 를 벌려 간접적인 관계심화를 기해도 좋다. 국제기구의 총본
산을 가지고 있는 스위스 같은 나라가 仲裁役을 맡는다는 것은
당면 긴급한 과제가 있을 때 주효하다. 가령 어민 보호요청이라
던가

또 소련과 정상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마레이아를 매개로 각
3각교역관계를 이룰 수 있다.

마지막으로 거론되어야 할 것은 北韓에 대한 孤立政策의 활용이다.
金日成政權이 주장하는 平和的 통일방안과 聯邦政府論의 허구성을
정면으로 타격하면서 한반도 긴장완화의 국제정치적 필요성을 대담
하게 개진함으로써 소련의 <제네바會議> 스타일의 발언권을 인정
해주는 형식을 취한다면 아마도 北韓과 소련은 더 이상 가까워
질 수 있는 여지를 잃을 公算이 커진다.

- (註 1) 中国大陸問題研究所：中共動態分析 <莫斯科亞洲政策的 新構想>
1969.7.25
- (註 2) 1966.4 소련共産党 第22次党大会
- (註 3) 國際生活 (소련) 1965.5
- (註 4) 新時代 (소련) 1965.5.30
- (註 5) Mosow News, 1969. NO. 9.
- (註 6) 外國貿易註 (소련) 1969. NO. 5
- (註 7) 世界週報 1969.7.1.
- (註 8) ИлПалла, 9, 8РРyCTa, 1953
- (註 9) XX cBe3A KIJeC, TOM I. CTP, 22.
- (註 10) 1969.7.24 닉슨은 亞洲各國巡訪길에 오르면서 樺도에서 記者會見을 가진후 귀국하자 말자 白雲館에서 兩党指導者를 招致, 미국의 아시아政策에 관해 설명하면서 <미국은 어떤 강대국(소련이 아닐지라도) 과도 아시아집단 안보 조치에 공동참가할 의사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 (註 11) 1972.1.28. <조선중앙통신> 인용
- (註 12) 同上
- (註 13) 72.8.15 毎日新聞 吉岡모스크바 특파원 稿
- (註 14) 南北赤十字會談日日綜合報告 第265号, 1972.6.17
- (註 15) 73.4.24 <조선중앙통신> 인용보도, 자르베슨誌 最近号
- (註 16) 京亞日報 73.5.7
73.4.2 駐유엔 中共代表 沈草良의 海底探査4原則宣言과 日4月9日字 한국政府의 협상용의 발표(外務部) 및 周恩來의 南北韓 日本 동과의 협상 고려 언명(카나다資源相) 맥드날드(傳言) 등 京亞日報 73.5.7